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옥
배재대학교 교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세상을 떠난 가운데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의 빈소를 찾으면서 소위 ‘조문 정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조문 정치인들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찬사와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임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면서 추모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관습이지만, 혹시 이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

다. 그런데 모든 정치인이 긍정적인 평가만 하고, 대부분의 언론도 그러한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물론 평범한 개인이라면 그의 사후에 나쁜 얘기는 덮어두고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한 나라의 야당 지도자와 대통령이 지난 공인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향후 국가와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생각은 없다. 단지 그와 그의 시대가 한국 정치에 남긴 두 가지 중요한 유산을 오늘의 시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유산은 민주화이다. 김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뛰어난 정치인이었으며, 야당 지도자로서 한국 민주화에 커다란 공을 세운 점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박정희·전두환 두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민주화 투쟁을 주도하고 결국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6·29선언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그가 보였던 용기와 카리스마,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은 한국의 정치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유산은 3당 합당을 통한 영호남 지역주의 대결의 공고화이다. 1990년

1월 22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3당 합당은 당시 국회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던 집권여당 민주정의당과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 및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면 그의 사후에 나쁜 얘기는 덮어두고 좋은 얘기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통일민주당을 이끌던 김 전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3당 합당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영호남 지역주의 대결을 공고화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3당 합당 주도 세력들은 합당의 명분 중 하나로 4당 체제에서의 지역주의(대구경북, 부산경남, 호남, 충청) 극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3당 합당은 영남 대호남 혹은 비호남 대 호남이라는 지역 대결 구도를 고착시키고 말았다.

양김(혹은 3김) 시대는 2000년대 들어 이미 실질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그 시대가 남긴 정치적 유산인 민주화와 지역주의는 여전히 오늘의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한국 정치의 과제로 남아 있다.

먼저 민주화는 하나의 과정이며, 한국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심화 내지 공고화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 최근 일부 국민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있고, 그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그가 보여 주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유산인 지역주의는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충청 지역이 3당 합당에서 빠지면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고, 유권자의 세대교체로 인해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지역주의 감정 또한 약해지고 있다. 다만 현재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인해 지역주의 정당 구도가 과장되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남은 과제는 비례제를 강화하여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일이다.

김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추모 분위기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 개인에 대해 정서적으로 추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그 시대가 남긴 정치적 유산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이를 한국 정치 발전의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냉철함도 필요할 것이다.

社說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왜 헛돌고 있나

광주의 공공 자전거 운영이 헛돌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저렴한 비용으로 도시교통난 해소와 시민 편의를 위해 너도나도 자전거 대여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과는커녕 애써 예산을 들여 마련한 공공 자전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광주 각 자치구의 공공 자전거 운영을 살펴보면 거의 나체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활용되고 있는 자전거는 동구 13대, 남구 7대, 북구 7대, 광산구 24대 등 51대에 불과했다. 4개 구가 보유 중인 자전거는 모두 221대지만 태반이 고장 났거나 창고에 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서구의 경우 비교적 공공 자전거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이다. 163대를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배치하였는데 같은 기간 시민들이 3310회나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구와 북구의 대여는 18회와 56회에 그쳤고 동구와 광산구도 301회, 322회로 서구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북구는 지난 2012년 공공 자전거 대부분이 낡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120여 대를 폐기처분하다시피 각 주민센터 등에 배분했다. 이후 아예 공공 자전거를 운영하지 않다가 올해 겨우 7대를 구매할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이용 실적이 미흡하고 고장이 잦다며 근래 7곳의 대여소를 없앴으며, 광산구와 남구도 비슷한 실정이다. 자전거 구입 비용도 시의 교부금만 바라다보는 실정이다.

서구와 이들 4개 구가 각기 다른 운영 실태를 보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자전거 확보와 대여 및 회수 과정의 어려움이 마친가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담당 공무원의 자세부터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었을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마인드가 필요하며, 이용자가 도착지에 자전거를 반납하는 무인 시스템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도 시급하다.

교수들이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출간했더니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대학교수 등 20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에는 광주·전남 지역 교수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일명 ‘표지 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 준 혐의로 전국 50여 개 대학교수 200여 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교수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새 책인 것처럼 발간해 준 출판사 세 곳의 임직원 네 명도 입건했다. 표지 갈이는 다른 사람이 쓴 저서와 연구논문의 일부 내용을 베끼는 표절 차원을 넘어 아예 책을 통째로 훔치는 명백한 ‘학문 사기’다.

이 같은 ‘표지 갈이’는 지난 30년간 대학가에 만연된 비리 관행으로, 전공 서적을 쓴 교수·저자 이름만 넣은 교수·출판사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삼각 커넥션’의 결과다. 원저자는 인기가 적은 이과 전공 서적을 퍼낸 출판사를 확보하기 위해, 허위 저자는 저서

출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3각 범죄’에서 특히 허위 저자들이 표지 갈이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저술 성과가 연구 실적으로 인정돼 재임용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공계 관련 전공 서적이 비교적 구매자가 적고 같은 책을 2권 이상 구입해서 비교해 보는 학생들이 없는 빈틈을 노렸다.

최근 교육부는 윤리지침을 강화해 연구 결과에 기여가 없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할 경우 모두 ‘부당한 저자’ 표시로 규정해 처벌하기로 했다. 대학 당국 역시 무나친 연구윤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들 교수들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표지 갈이 교수는 그 죄질이 나쁜 만큼 즉각 강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차체에 현행 대학교수 평가제도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침묵의 질병 C형 간염



박희
순천 한국병원 원장

C형 간염은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환자들은 피로감, 열감, 근육통, 소화불량, 우상복부불쾌감, 황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신이 C형 간염에 감염된 지 모르고 지내다가 20~30년 후 간경변증이나 간암 등으로 진행하면 그 때서야 수십년 전 C형 간염에 걸렸던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C형 간염에 대한 대중들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C형 간염으로 인한 간질환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우리나라의 간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8.4명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이다. 2위인 일본에 비해 2배나 높다. 간암의 첫 번째 원인은 B형 간염이며, 두 번째 원인이 바로 C형 간염이다. 특히 최근에는 60~70대 고령층에서 C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 발생이 두드러진다.

C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 발생이 60대에서는 18.2%, 70대 이상은 37.5%에 이른다. 예전에는 고령층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환자가 드물었으나 최근에는 C형 간염이 고령사회의 새로운 병명이 된 것이다. 50~60대일수록 C형 간염 위

험이 높고 만성화 비율도 높은 특징이 있다.

C형 간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다. 급성 C형 간염의 약 20~30%는 감염 6개월 이내에 바이러스가 제거되거나 자연 치유되지만 약 70~80%는 만성 C형 간염으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30~40% 정도가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된다. 즉 만성 C형 간염을 방치하면 간의 섬유화가 진행되고 간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C형 간염 환자가 간암에 걸려 사망하는 비율은 미감염군 대비 무려 2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형 간염은 예방백신이 없어 C형 간염의 주요 감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주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C형 간염바이러스는 혈액을 통해서 감염된다. 비위생적인 문신이나 피어싱 등을 할 때 사용되는 주사침이 주된 감염경로다. 이외에 C형 간염 환자와 같이 면도기나 칫솔, 손톱깎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맥주사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도 감염 원인이 되기도 한다.

C형 간염은 완치를 목표로 하는 질환이다.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해 간경변증의 합병증과 간암의 발생을 막는 데

치료 목표가 있다. 지금까지의 치료는 주사제인 인터페론과 경구 약제인 리바비린 병용 치료였으나 여러가지 심각한 부작용으로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항바이러스제의 급격한 발전으로 6개월간 경구치료만 치료하면 90%이상에서 치료 효과를 보이고있다. 경구약 치료는 주사제에 비해 치료 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완치율도 훨씬 높기 때문에 C형 간염을 빨리 발견해내고 즉각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진행성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경우 약물치료를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C형 간염은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생애주기 검사나 고령자에 한해 선별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C형 간염의 즉각적 치료는 치료의 성공률을 더 높일 뿐만 아니라 간경변 및 간세포암종의 발생률을 낮추고, 간 관련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C형 간염 환자는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도 검사가 필요하며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등 혈액이 묻을 수 있는 생활기구의 공동사용을 피해야 한다. 간에 좋다고 알려진 민간요법은 피하며 반드시 금주와 금연을 해야 한다.

기 고

사업 전환으로 지역산업 위기 돌파를



김연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환경이 좋아지면 수익성이 높았던 사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시대가 바뀌면 수요가 달라지고, 새로운 기술이 기존 제품의 경쟁력을 무력화하기도 한다. 수요자인 모기업의 여건이 어려워지면 협력업체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들도 이런 예로에 직면해 있다. 2000년에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된 광산업은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으나 최근 광통신, LED 등 주력분야 경쟁력 약화, 2012년 정부지원 종료 후 자생력 확보 미흡으로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백색가전 또한 모기업이 싼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이전하면서 협력기업들은 수수물량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선박수

의 성장 잠재력을 인지하고 지속적 연구 개발을 통해 빌딩자동제어 특장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로 탈바꿈하여 해당 분야 1위 업체로 자리 잡았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면서 정부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경영예고를 겪는 중소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전환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업전환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제도는 업력 3년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업종을 다변화하고자 할 때 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전환 융자예산은 1120억원이며 다른 자금보다 유리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실패한 기업사례처럼 광산업도 광통신, LED에서 확보된 역량을 바탕으로 광학렌즈·레이저·의료기기·광센서 등 새로운 유망분야로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전의 경우는 그동안 백색가전의 메카로서 금형·사출·열교환기·모터 등 여러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여 대기업이 시도하기 어려운 산업용 기구나 소형가전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군이 위기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에도 사업전환과 업종다변화

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지역 혁신도시에는 한전을 비롯한 전력, IT, 농업 관련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해왔다. 이들 공공기관에서도 물품조달, 용역 구매 등의 과정에서 지역기업을 활용하고자 하니 현재 상태에서는 적절한 기업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유사분야의 지역기업들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변화를 깊이 관찰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것은 CEO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다. 기업 스스로 새로운 성장 원천을 찾기 위하여 노력할 때 정부, 지자체, TP를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신규 아이템 발굴에 도움이 되는 시장동향 소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전, 기존 역량을 활용한 R&D 지원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사례조사를 통해 업종다변화와 사업전환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지금수요 이전단계에서 필요한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편을 찾기 위하여 노력중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슬기로운 사업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마련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m.kr

無 等 鼓

전남이 고향인 김신혜(38·여)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목포 교도소에 복역 중인 무기수였다. 그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병아리 기차’ 시절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 친구를 도와주세요’라는 글 씨 친구들의 호소를 접하면서 그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이후 2001년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무기수 김 씨를 면회할 기회가 있었다. 기차를 본 그는 눈물부터 쏟았다. “정말 부진을 살해하지 않았나요?” 몇 마디 묻는 순간 교도관의 제지가 있었을. “누구시죠?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눈물만 흘리던 김 씨에게서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면회실을 나오고 말았다.

기자를 만나러 서울에서 광주까지 내리마는 당시 무문사신상규명위원회 고 모 조사관은 ‘무죄의 증거가 없어 유죄를 받게 되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경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됐다 것이었다.

가령 소설가를 꿈꿨던 김 씨가 작성한 습작노트에 독살에 관한 자료를 조사한 메모 등이 있었던 것 등이 그것이다. 아버지를 위해 보름을 다수 구입한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문을 품게 하는 자료도 적지 않다. 고 조사관은 “수면유도제를 술에 타서 아버지에게 권했다는데, 경찰이 제시한 그 분량으로 따지면 죽과 같은 상태여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다행히 해남지원이 김 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 법원은 당시 경찰 수사의 절차가 잘못됐다며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불법해 광주고법에 항고한 상태다. 향후 논란이 많겠지만 김 씨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윤영기 문화미디어부장penfoot@

무기수 김신혜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상·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42	여론대처부 2200-696	광고매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지털 팀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